

한 여름 국회...한 겨울 정국

강경화 임명에 한국당·바른정당 강력 반발

국민의당 오늘 의총...추경·정부조직법 등 분리 대응

여야의 인사청문회 대치가 계속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등 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는 한결같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계획대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더 이상 협치를 앞장서는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은 더욱 강경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다른 장관 후

보자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지도부-외통위 간사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조속한 시일 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뒤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출석시켜 인사시스템 실패에 대해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19일) 6개 상임위에서 장관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위한 계획서 채택이 예정되었지만 이렇게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에 내일 채택회의에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며 “대신 내일 오전 예정된 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여해 여당에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당분간 팍팍한 정국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위원회인 예결특위나 안전행정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국민의당이 사안별로 분리 대응 방침을 정해 야당이 공동으로 여당에 대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19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사안과 연계한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등 사안별로 당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대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

욱 인사수석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야당 의원 동행 요청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와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은 별개라면서 야당의 연계전략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인사문제로는 여야가 의견이 갈릴 수 있더라도 민생문제를 두고 대립한다면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절박성과 시의적절함이 생명인 추경을 논의조차 못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오는 2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 같은 각 당의 입장차로 이번 주 국회는 야당 일부가 불참하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캐스팅보트’ 국민의당도 靑 책임론... 꼬여가는 정국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에

초선 10여명 “검증자 문책을”

이용호 “김·조·송도 부적절”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최근의 ‘인사 파동’과 관련,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정국이 더욱 꼬일 전망이다.

국민의당 소속 초선의원 10명은 18일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안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알면서도 은사에 대한 보은지심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누락했다면 불종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5대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흠결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차제에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장관급 17명 중 15명이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드러났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 한 데 대해 국회 운영위에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은 표절이고,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다. 더 이상 장관 자격을 논할



“부실검증 책임져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상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이 인사검증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적도 없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에 거짓해명이 드러났다.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방산업체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방산비리 적결의 적임자가 아니라 고 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비리의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이날 청와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과 관련,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협치 정신을 훼손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은 물론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와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 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

한데 대해 “미국은 (북한 억류로 혼수상태에 빠진) 오토 웬비어로 분노하는데, 유화 제스처로 엇박자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관련한 불편함이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과 먼저 조율할 협상카드를 미리 보여준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실익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권 ‘전대모드’

홍준표 vs 친박

한국당 홍준표·원유철·신상진 3파전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3 전당대회’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5선의 원유철 의원, 4선의 신상진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각 경선주자들은 지난 17일 후보등록을 한 뒤 19일부터 전당대회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14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를 벌인다.

기호 추첨 결과 1번은 신상진 후보, 2번은 홍준표 후보, 3번은 원유철 후보에게 부여됐다.

경기도 평택시갑이 지역구인 원 의원은 후보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20~30대 젊은층과 여성에게 어필을 하고 전국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출신의 젊은 대표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후보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이 몰락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려면 새로운 인물을 세워 구대를 맡김이 최우선”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등록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홍 전 지사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는 안 일하고 나태했다. 영원히 집권할 것처럼 오만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재건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3선의 이철우 의원, 재선의 김태흠·박맹우 의원, 비례대표 초선의 윤종필 의원, 이성현 전 의원, 이재만 대구 동구를 당협위원장, 류어해 수석부대변인, 김정희 현 무궁화회 총재 등 8명이 도전장을 냈다.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은 총 4명으로, 이들 중 여성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강원, 호남·제주에서 1회씩 타운홀 미팅을 한다. 오는 23일에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컷오프를 실시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바른정당 광주서 경선레이스 시작

5명 DJ센터서 토론회...“5·18정신 헌법 수록 긍정적”

바른정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호남권 경선과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광주에서 열리는 등 경선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해훈,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김영우 의원(기호순) 등 당원주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권역별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태경 후보는 “4·19 정신이 반영된 것도 1987년이었다. 6·10 항쟁 정신을 기리려고 4·19 정신을 넣은 것”이라며 “이번에도 탄핵과 같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민주화운동 정신을 넣

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훈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면서 “같은 선상에서 4·19 정신으로 이어진 마산의 3·15 정신도 넣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식이면 매년 헌법을 바꿔야 하니 이번에 민중항쟁사를 다 나열해 놓고 보자”고 말했다.

반면, 지상욱 후보는 “헌법전문이 인권이나 자유 등을 벗어나서 특별한 사건들로 채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헌법전문에 넣기보다는 국민정신을 고양하는 다른 활동이 필요하다. 그게 국가통합에 맞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정의당 당권 박원석·이정미 각축

정의당의 차기 당권경쟁이 박원석 전 의원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8~19일 진행되는 후보 등록에서 군소 후보가 더 등장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박 전 의원과 이 부대표가 맞대결을 펼치는 양상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4일 출마 선언문에서 “진보정치 안의 시각과 경험은 1세

대 리더십으로도 충분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정당 밖으로 안 내할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지난 15일 출마 선언문에서 “지체된 차세대 리더십은 이정미의 당성을 통해 그 길이 뻗 뚫릴 것”이라며 “당선되지 않을 줄 뻐한 알면서도 심상정에 투표했던 200만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자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총 매입금액 : 11억원

▶1인 2,000만원 이상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